

전진숙 “국가책임 돌봄, 현장에서 완성돼야”

대정부질문 통해 필요 보완 과제 제시 “통합시 자율적 활용가능 재원 마련을”



기 재원 로드맵 마련 ▲범정부 돌봄정책 컨트롤타워인 가정 '돌봄청'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재난심리지원 체계와 관련, 전 의원은 정부의 진상규명 강화 노력과 제도 개선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보다 체계적인 장기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 의원은 “이제는 초기 대응을 넘어 국가가 피해자에게 도움을 찾아 나서기 전에 먼저 손 내밀고, 장기적인 심리 회복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재난 이후 심리지원 과정에서 기관 간 역할 중복, 사례관리 단절, 장기 추적 부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간 역할 재정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세월호, 이태원,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등 재난 피해자에 대한 장기 코호트 연구 체계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 전 의원은 “대한민국 최초의 시·도 통합이 성공하려면 통합특별시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정적 재정 지원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돌봄은 일부 취약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정부가 시작한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완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진수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은 13일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돌봄, 행정통합 등 정책의 방향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 과제를 제시했다.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통합돌봄의 중요성을 다시 세우고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제도를 본격 출발시킨 것은 돌봄국가로 가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며 “이제 중요한 것은 제도의 출발을 넘어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행 기반을 촘촘히 갖추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통합돌봄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제도 시행 기반을 마련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시행 초기 단계에서 드러난 보완 과제를 짚었다.

올해 통합돌봄 예산과 관련, 그는 “지자체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시·군·구 평균 2억7천만원 수준으로 지역 현장에서 충분한 서비스 기반을 갖추기에는 다소 제한적”이라며 향후 예산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전담인력 문제에 대해서도 전 의원은 “제도가 안정화하려면 읍·면·동 사례관리 인력과 보건소 전담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지역별 재택의료센터 편차 해소를 위한 인프라 균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전 의원은 ▲2027년 통합돌봄 예산 확대 ▲중앙·지방 재정분담 구조 개선 ▲중앙



국회 대정부 질문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명호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전남권 의대 동·서부 분산 모델 필요”

의예과·의학과 지역 간 분산 운영 배치 2개 이상 부속병원...공공병원 연계 강조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은 13일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남도 의과대학 설립 문제를 핵심 의제로 제기하며 “한 지역 집중 방식이 아닌 동·서부 상생형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김민석 총리를 상대로 정부가 전남 특정 지역에 의대 기능을 집중시키는 추진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분산형 모델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이미 타 대학들은 의예과와 의학과를 분산 운영하거나 복수 부속병원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며 “전남 역시 이러한 방식의 설계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시한 상생형 모델은 ▲의예과·의학과 지역 간 분산 배치 ▲2개 이상 부속병원 확보 ▲기존 공공병원과의 연계 활용 등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단순히 의대 신설 여부를 넘어, 전남 전체 의료 인프라를 동시에 확충하는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인구감소 지역 지정 체계와 관련, “읍·면 단위 위험지역 별도 지정과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지원계정) 활용을 검토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다자녀 국가장학금 기준 확대 ▲사학연금 제도 개선 ▲인구감소지역 지정체계 보완 ▲채용공고 임금 공개 의무화 등 민생 현안도 함께 짚었다.

/김진수기자

안도걸, 국회 빛낸 ‘으뜸언어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이 13일 열린 제11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시상식에서 ‘으뜸언어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국회일치를위한정치포럼’과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국회 내 품격 있는 언어 사용과 건전한 정치문화 확산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그동안 안 의원은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정책 질의 및 대외 발언 전반에서 사실 기반의 정확한 표현, 절제된 메시지, 정책 중심의 논리적 언어 사용을 일관되게 유지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경제·재정 분야 주요 현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자극적 표현이나 정쟁적 발언 지양 ▲수치와 근거에 기반한 설명을 통해 정책 이해

도 제고 ▲국민 체감 언어로 복잡한 경제 이슈 설명 등 ‘경제통 정치인’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 있는 언어 태도를 동시에 보였다는 평가다.

또한 최근 증동발에너지 위기, 전정 추경 필요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위기 상황을 과장하거나 불안을 조장하기보다, 구조적 원인과 대응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메시지를 지속 발전해 온 점도 수상배경으로 꼽힌다.

안도걸 의원은 “갈등을 키우는 언어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언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언어가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는 언어를 쓰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사실에 기반한 책임 있는 정치언어로 국민께 다가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진수기자

행안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차질없이 지급”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

행정안전부는 13일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신속하고 차질없는 지급 준비를 위한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회의에서 피해지원금 사업이 지역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고 국민에 온전

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각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지방정부 별로 부단체장 중심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전담TF’를 구성해 지원금 신청과 지급, 사용 전 과정에 행정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과 선불카드 등

오프라인 지급 수단에 대한 수요를 예측해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선불카드 디자인 등에 취약계층 여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 불편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을 적극 운영해 지원금 신청 등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 오프라인 신청자 안내, 콜센터 상담을 위한 인력운영 계획 수립과 보조인력 채용·교육도 신속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진수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회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